

▶特輯－壬午軍亂 110 周年紀念，壬午軍亂을 해부한다

壬午軍亂은 왜 일어났는가

李 玟 源

(檀國大 史學科 講師)

머 리 말

1882년(高宗19) 6월 5일(음) 武衛營 소속의 舊訓練都監 군인들은 13개월치나 밀려온 軍料중 겨우 한달치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만이 폭발, 대규모의 폭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宣惠廳 堂上 閔謙鎬의 집을 습격하고 이어 가세한 서울의 백성들과 더불어 ‘閔氏戚族政權’ 인물들의 집과 일본공사관을 공격하였으며, 마침내는 궁궐을 쳐들어와 척신을 살해하고 왕비를 수색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軍民의 여망을 안고 10년만에 재집권한 대원군이 곧바로 서정개혁을 착수하지만, 난을 계기로 入京한 청군에 의해 그가 납치되면서, 신정권은 겨우 30여일만에 무너졌다.¹⁾

1) 魚充中, <從政年表>(韓國學文獻研究所編, 『魚充中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pp. 827-830). 黃玟, <梅泉野錄>上(韓國學文獻研究所編, 『黃玟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pp. 973-980), 『高宗實錄』壬午19년 6월~7월條.

壬午軍亂(혹은 壬午軍變)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甲申政變, 乙未事變 등과 함께 서울을 무대로 전개된 19세기말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하나이다. 이 사건은 개항 이후 형성되어간 국내 여러 세력의 대립구조, 특히 개화와 척사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권내부의 대립은 물론 일본과 청국의 대조선정책이 작용하고 서구열강과의 조약체결이 진행되어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한국근대사의 전개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우선 사건 직후 청·일 양국은 즉각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둘러싼 내외의 위기가 가중되었다. 일본의 강압적 요구에 직면한 조선정부는 제물포조약의 체결로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는가 하면, 청국은 속방화정책을 노골화하면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여 갔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정치권 자체 내에서도 개화와 수구의 대립이 격화되어 갑신정변의 직접적인 원인이 배태되었다. 또한 이 기회를 틈탄 영국의 관세자주권에 대한 침해와 低率關稅의 각국에의 적용은 이후 조선의 근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입원을 원천적으로 고갈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만을 놓고 보아도 이 사건이 한국근대사에 미친 파행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임오군란이 개항과 갑신정변,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근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할 때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종래 몇몇 先學들이 관심을 가진 바 있지만, 의외로 기본자료가 부족한 이 주제에 대해 여전히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우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오군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없고 대부분 임오군란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면서 일부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선행작업으로서 자료의 수집과 보완 등이 앞서야겠지만, 이 점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여기서는 군란의 전개과정에 보이는 몇가지 주목점을 토대로 이의 원인에 대해 개략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로 한다.²⁾

1. 軍亂의 遠因

1) 朝鮮의 開港과 日本商權의 확대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목표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조선의 지배였다. 운양호사건을 유발시켜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나 개화파를 부추겨 갑신정변을 촉발시킨 것, 갑오농민전쟁을 빌미로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의 '保護國化'를 기도한 것, 삼국간섭에 대해 조선왕후의 시해로 대응한 것 등은 모두 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근대의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점차 극심한 위기에 몰리게 되었던 것도 상당부분은 이러한 일본의 대조선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임오군란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임오군란은 하등 국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강화도조약 이후 누적된 국내 대항의 쟁투에 불과하다”는 菊池謙讓이나 “청일 양국에 의한 민족적 억압의 격화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은 임오군란으로 폭발하였다”고한 小谷汪之 등의 주장³⁾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선 菊池謙讓의 주장은 종래 일본학자들이 한국근대사의 여러 사건을 ‘개화파와 수구파’, ‘대원군파 민비’, ‘친일파와 친로파’의 대립 등 주로

2) 군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방이후 大院君과 閔妃의 대립구조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외국자본주의의 침입과 농민·수공업자 등 하층민의 생활불편을 강조한 입장, 開化와 守舊의 문제를 둘러싼 대내적 정쟁과 개항으로 인한 외국자본주의의 침입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 등이 있다.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震檀學會, 1961). 申國柱, 〈壬午軍亂의 性格〉(『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權錫奉, 〈壬午軍變〉(國史編纂委員會篇, 『韓國史』16, 探求堂, 1981). 田保橋梁, 〈壬午軍變の研究〉(『靑丘學叢』21, 1935).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上 鷄鳴社, 1937). 田中直吉, 〈日鮮關係の一斷面—京城の變〉(日本政治外交史學會編,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 1957). 山邊健太郎, 〈壬午軍亂について〉(『歷史學研究』257, 1961; 『日本の韓國併合』, 1966). F. C. Jones, *Foreign Diplomacy in Korea, 1866-1894*,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 1935).

3)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上 pp. 555-557); 小谷汪之,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의 성립〉(楊尙弦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 세계절출판사, 1985, pp. 19-21).

대내적 갈등을 강조한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난의 진행과정에서 보인 군민에 의한 일본교관의 살해와 일본공사관 습격, 일본공사 일행의 추방 등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는 임오군란을 단순히 국내대항의 쟁투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하게 한다.

한편 小谷汪之는 개항이후 임오군란 이전까지 청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민족적 억압'을 동일한 수준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에서 조선의 지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였음이 共知의 사실이지만, 청국이 임오군란 이전까지 조선의 지배를 목표로 하여 일본과 같은 침략정책을 추구하였는지, 또는 조선의 군민으로서도 청국을 일본과 동일한 민족적 억압의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따라서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개입이 적극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임오군란 이전까지 청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민족적 억압이 매한가지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임오군란의 주요한 외적요인은 무엇일까. 군료의 지금을 둘러싸고 돌발한 군인의 봉기가 곧바로 군민의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로 이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민의 일본공사관 공격과 일본교관 살해 등은 분명 청국이 아닌 일본측에 대한 군민의 敵愾心을 보여 준다. 이점에서 개항이후 임오군란까지 약 6년 사이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1876년 일본은 조선에 개항을 강요하여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측이 종래 미국·영국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던 조약을 역으로 모방하여 조선에 강요한 12개 조항은 조선의 주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었다. 이 조약의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래의 조선과 청국의 관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조선문제를 둘러싼 청국과의 갈등의 시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측의 개항과 領事裁判權의 허용, 통상장정의 체결 등이 약속된 것으로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지화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이어 조인된 수호조규부록과 통상장정(8.24)에는 근대사상 유례가 없는 무관세조항이 들어 있었고, 일본상인의 개항장을 통한 무역활동과 일본화폐의 유통허용 등 일본에게 특권이 주어졌다.

이로부터 야심찬 일본상인들이 다투어 조선의 시장개척에 주력하여 조선의 대외무역을 거의 독점하였다. 여러 통계에도 보이듯이 개항 이전과 이후는 조선의 대외무역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1877년-1882년 사이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과의 무역에서 실제로 일본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 유럽의 제품이 88.3%로 나타난다. 일본은 유럽의 상품을 중국(上海)에서 일본(神戶)으로 들여와 다시 조선(개항장)으로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을 하였다. 그중 일본을 통한 수입품의 주종은 영국산의 면포·마포 등 면제품이었고 조선의 수출품은 쌀·콩 등의 곡물류가 대부분이었다.⁴⁾

그러면 이러한 양태로 전개된 일본과의 무역거래는 조선측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켰는가. 무엇보다도 자급자족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조선사회의 재래의 수공업자와 농민층에 그弊害가 심하였다. 즉 외국의 공장생산물과 조선의 미곡으로 대표되는 곡물 교역, 즉 2차산품과 1차산품의 교역은 필연적으로 식량의 부족과 곡가의 앙등을 몰고 왔다. 일본상인의 곡물매점 등에 따른 국내의 식량부족과 물가의 등귀를 기화로 일부 특권상인과 지주들이 이윤을 축적했다고는 하지만, 소작농민이나 중소상인, 재래의 수공업자 등이 몰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의 불안요인이 가중되어 갔다. 따라서 난의 진행과정에 대원군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고, 미가의 앙등을 이용, 사리를 꾀하는 중간 관리가 있었다 하여도 문제의 본질은 개항 이후 악화된 경제구조에서 찾아진다. 그러한 경제구조를 배태한 것은 일본상권의 침투였으며 이의 계기는 일본에 의한 강제적 개항이었다.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國譯 韓國誌 - 本文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34-538).

바로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조선군민의怨聲이 높아져 갔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본공사관측에 대한 적대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근대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 그리고 그의 첫 걸음인 1876년의 강화도조약의 강제적 체결과 이로부터 야기된 일본상권의 확대는 임오군란의 주요한 외적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政府의 初期開化政策과 衛正斥邪運動

임오군란을 계기로 잠시 정권을 장악한 것은 대원군이었고 그의 서정정책은 복고적이었다. 이점은 난의 전개과정에서 개화파 인사들의 가욕이 파괴된 것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정부의 기존 개화정책에 대한 反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살펴보자.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의 조선침략정책과 맞물린 정부의 개화정책 및 그에 다른 보수유생들의 척사운동은 1880년 - 1881년을 거치면서 개화와 척사의 갈등을 보다 심화시켜 갔다. 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유생들과 대원군측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사척사운동’이고 ‘安驥泳事件’ (혹은 李載先事件)이었다.⁵⁾ 앞서 개항의 주요한 동기는 일본측의 무력요구와 청국의 권고였지만, 정부측의 일정한 의지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화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내외정세의 인식하에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개화파인사들의 역할과 개화에 대한 뚜렷한 구상이 없이 단순히 종래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한 민씨척족정권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반발이 함께 작용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요컨대 정치적 목적하에서 개화파를 지원한 색채가 농후하고, 이점은 대원군측의 반발은 물론, 임오군란 뒤 척족정권측과 급진개화파와의 새로운 갈등의 전개를 예시한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일 갑신정

5)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檀大出版部, 1985, pp. 158-192).

조성윤, 〈개항직후 대원군파의 쿠데타 시도 - 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 小谷汪之, 앞의 책 pp. 170-193.

변을 통해서 잘 입증된다.⁶⁾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개화와 척사의 이념적인 대립이 민씨척족정권과 대원군세력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외압이 가중되는 속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에 의한 개화정책의 추진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華夷의 관념에 깊숙히 젖어있던 당시의 보수유생 및 일반국민과 일정한 거리를 격한 가운데 그것도 일본세력과 근접하여 추진되었고, 미국·영국 등 구미제국과의 조약체결도 이루어져 갔다. 이에 따라 보수유생들의 개화파에 대한 성도와 민씨척족정권에 대한 반발이 격화되어 갔다.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강화도조약의 체결이후 정부에서는 개화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해외견문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다. 즉 1·2차에 걸쳐 일본에 파견한 修信使(1876, 1880)와 신사유람단(1881.2), 그리고 청국에 파견한 領選使行(1881.11)이 그것이다. 이 중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일행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駐日淸國公使館 參贊官 黃遵憲의 『朝鮮策略』과 그 핵심이 되는 聯美論은 앞서 개항당시 반발을 보였던 보수유생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1881년 4월경에는 유생들에 의한 전국적인 규모의 척사·척왜운동을 몰고 왔다(辛巳斥邪運動).⁷⁾ 즉 척사를 주장하는 유생들의 왜양일체론에 의해 이미 일본과의 개항자체가 최익현 등 보수유생들의 반발을 샀던 상황에서 러시아의 남침에 대응한 논리로서의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의 주장은 서양을 禽獸로, 천주교를 邪學으로 여기던 보수유생들로 부터는 물론 관원들로 부터도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부터 일어난 것이 유생 이만손을 소두로 하는 ‘嶺南萬人疏’ 사건(1881.3.25)이었고, 洪時中, 洪在學 등

6)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by Ensign George C. Foulk, December 4-7, 1884" in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Pusan national Univ., 1982), pp. 990-998.

7) 權五榮, <金平默의 斥邪論과 聯明儒疏> (『韓國學報』55, 1989 여름, pp. 140-152). 宋炳基, <衛正斥邪運動 - 辛巳斥邪運動을 중심으로> (『韓國史市民講座』7, 一潮閣, 1990).

의 상소였다.⁸⁾ 이처럼 반개화·반외세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1881년의 위정척사운동은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정부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斥邪綸音’을 내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유생들의 척사운동을 비판하고 정부의 개화정책을 지지하는 前掌令 郭基洛 등의 상소도 있었다.⁹⁾ 그리고 수구파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정부에서는 중앙기구의 개편과 개화파인물을 등용하게 되었던 바 이는 더욱 유생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정부측에서는 대원군이 설치한 三軍府를 폐하고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한 바 있었고(1881.1),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다시 개편하여 종래의 12司를 7司로 하였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개화정책은 외국사절의 접대문제, 일본·청국에의 사절단 파견과 유학생의 파견, 행정기구개편, 신식군대의 창설 등에 따라 심각한 재정의 문제가 뒤따랐다. 즉 정부비용의 증대와 그에 따른 각종 조세의 증가와 과중한 세납을 유발하였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중간관리의 탐학과 농간으로 일반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보수 유생들에게는 중앙기구의 개편과 그에 따른 군제의 개편 등이 일본세력의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의구심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유생들의 탄핵을 받아 권좌에서 밀려난 대원군에 대한 鄉愁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였다. 서원철폐에 관한한 대원군은 유생들의 지탄을 받기에 족하였지만, 그의 강경한 쇄국정책은 유생들의 척사의 논리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생들에 의한 척사·척왜운동이나 당시 일반 민중사이의 척왜분위기는 대원군과 그의 지지세력을 고무시켰고, 이것이 민씨척족정권을 전복시키려한 ‘安驥泳事件’으로 이어졌다. 비록 실패에 그치고 말았지만 이 사건에는 민씨

8) 黃玹, 『梅泉野錄』, 辛巳 18년 5월 15일, 『承政院日記』, 高宗 18년 6월 8일.

9) 『高宗實錄』, 辛巳 18년 5월 15일, 『承政院日記』, 高宗 18년 6월 8일.

10) 全海宗, 〈統理機務衙門設置의 經緯에 대하여〉(『歷史學報』, 17. 8, 1962)

척족정권의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은 대원군측 인물들과 유생측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를 보러온 유생들과 시정사람들을 선동하여 궁궐을 침입, 국왕을 폐위하고 척족인물들과 일본공사관, 별기군교련장 등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은 유생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개화정책과 민씨척족정권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 대해 적대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따라서 비록 안기영사건을 계기로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대원군의 우익이 철저히 제거되고 척사운동도 한동안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척사운동의 봉쇄가 설득이 아닌 탄압에 의한 것이었고, 대원군 자신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바로 임오군란에서 새로이 폭발하게 된다. 즉 민씨척족계열 인사들의 집과 『朝鮮策略』을 국왕에게 바친 김홍집 등 개화와 관료들의 집이 파괴되고 일본공사관과 일본교관 등이 군민의 표적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볼 때 임오군란은 바로 앞서 있는 신사척사운동과 ‘安驥泳事件’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고,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위정척사적 입장에서의 반일·반개화운동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2. 軍亂의 近因

1) ‘閔氏戚族政權’의 失政과 大院君

임오군란의 원인을 단순히 ‘국내대항의 상쟁’이라고 한 菊池謙讓流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적어도 개항이후 한국 근대사의 제반사건을 분석할 때 청국과 일본, 나아가 영·러·미·불 등 열강과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대원군과 민비의 정쟁’ ‘개

화와 수구의 갈등'만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국내의 제정치집단이나 이해집단의 일정한 역할과 갈등이 전적으로 무시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종래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 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서술한 것 자체는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적어도 임오군란까지 양자를 축으로한 각 집단의 이해와 갈등은 어느정도 당시의 사태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민비를 중심으로 한 척족정권의 정치·권력의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씨척족세력'은 1866년(高宗3) 민비의 왕비책봉 이후 과거와 門蔭을 통한 관직 진출을 시작하였고, 1873년에는 서원철폐를 단행한 대원군이 유생들의 탄핵을 받는 기회를 이용, 대원군을 축출하고 고종의 친정을 성공시키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대원군집권시 소외되어 있던 인물들과 노론세력을 규합하여 1873-1895년까지 근 20여년간 정권을 장악, 국내정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다.¹¹⁾ 그 과정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당시에는 주로 청국의 지원을 통해, 청일전쟁 전후로는 일·러측과 일정한 관련을 지으면서 국내의 보수파나 급진개화파 혹은 농민의 저항으로부터 정권을 유지해 갔다.

임오군란과 관련지어 1881년의 상황을 주목해 보기로 하자. 이 해에도 민씨척족정권은 수구파의 위정척사론과 '안기영사건' 등의 토왜 반정음모사건을 계기로 대원군파와 특히 남인계열의 수구파에 대하여 강력한 탄압을 가하면서 정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갔다. 이로써 지배집단내의 分裂이 더욱 심화되었고, 백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조장되었다. 거기에 민씨척족정권의 매관매직, 관료층의 부패, 국고의 낭비 등은 개화, 척사의 갈등과는 별도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국외적 상황을 배제한다면 실로 조선은 무한정 민씨척족세력의 지

11) 金淑淵, <1880年代 閔氏戚族政權의 政治的 性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배하에 놓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한 권력의 정점에 왕비가 있었다. 민씨척족은 최고의 귀족이었고 토지소유자이기도 하였다. 결국 왕비의 등장은 대원군의 10년세도로 정계에 등장한 왕실세력을 외척세력이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이었다. 이후 정치적으로 내세운 것이 뚜렷한 방향과 목표가 缺如된 개화정책이었다.¹²⁾ 그것도 민씨정권의 세력강화와 연관되는 것에 치중되었다. 실제로 별기군의 창설과 통리기무아문 등의 개편에서 일부의 개화파인사들을 제외하면 核心은 민씨척족, 혹은 반대원군파 인물로 독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점에서 민씨척족정권하의 기구개편 등은 개화정책이라는 측면과 개화정책을 빙자한 정권강화라는 측면이 공존한다.

임오군란이후 청군이 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선에 군사를 주둔시킨 한 가지 이유는 이러한 점에도 있다. 청국의 권고에 따라 구미와의 조약체결을 순순히 수용하는 민씨척족정권을 지원하고 청국의 권고에 대해 불순종하는 대원군을 납치하여 일본이나 서양각국과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민씨척족정권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씨척족정권의 개화정책은 이점에서 대외적으로는 청국의 권고가 크게 작용한 것이고, 1880년대초 서구 각국과의 조약체결은 영·미·일 등이 청국을 이용, 『朝鮮策略』 등을 통하여 조선에 유포시킨 恐露意識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실제의 개화파라면 어느면에서는 고종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었을 뿐이라는 주장¹⁵⁾이 있듯이 민씨척족정권에서 정권유지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개화정책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추구하였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어떻든 1880년대초의 상황에서 민씨척족정권하의 개화정책은 결코

12) "Military Riot in Korea", Cotton to Young, Aug., 29, 182, in Park Il-Keun, ed., *op. cit.*, pp.932-934.

13)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pp. 435-442.

14) 崔文衡, 『제국주의 시대의 列強과 韓國』(民音社, 1990, pp. 37-41).

15)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by Ensign George C. Foulk, December 4-7, 1884" in Park Il-Keun, ed., *op. cit.*, pp. 990-992.

그들이 앞서 주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책방향은 보수유생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당연히 진보당으로 비치지게 되었다. 결국 이점은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대원군측과 여전히 위정척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보수유생들의 반발 나아가 일반국민의 불만을 사기에 족하였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불만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이들의 사치와 낭비, 매 관매직, 관리의 부정과 탐학 등이었다.¹⁶⁾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유독 이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로 지나치게 과장된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민씨척족정권하의 이와 같은 失政은 개항으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들과 맞물려 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씨척족정권의 정치·권력의 행태와 실정, 그리고 그와 대립적 관계에 있던 대원군세력의 존재는 임오군란의 가까운 한가지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2) 軍制改革과 舊式軍人의 차별

그러면 개화정책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이 군인들의 불만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었던가. 이 시기 정부측에 의한 제도개혁 중의 하나는 군제개혁이었다. 1881년(고종 18) 4월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였고, 동년 12월에는 군사제도에 대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의 훈련, 용호, 금위, 어영, 총융 등의 5영을 폐지하고 무위, 장어의 양영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별기군의 창설과정에는 실상 일본공사 花房義質의 권고와 지원약속이 있었고, 일본군 소위 堀本禮造가 교관으로 배치되어 일본식 훈련을 습득케 하였다. 그러나 양영의 군사들을 별기군과는 달리 차별대우를 함에 따라 구 5영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일본교관에 의한 신식군대의 조련은 과거에 왜국정책을 취하던 대원군집정기에 받던 대우와 비교되어 구식군대

16) 黃玹, 『梅泉野錄』上, pp. 961-2, 944, 956.

의 排日感情을 더욱 고조시켰다. 따라서 이들 군인들에게는 개혁을 강요한 일본측과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던 민씨척족정권이 자신들의 입지를 어렵게한 주요 대상으로 인식된 것이다.¹⁷⁾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수차에 걸친 군병들의 반항은 있었다. 예컨대 1863년(철종 14) 금위영 소속 군병들의 소요와 1877년 8월의 訓局兵들의 소요로서 이 사건들은 모두 군료때문에 야기되었다. 이런 일은 대원군 집권시기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군제개혁 후 구 5영소속 군병들의 대부분이 실직하여 수천명이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거기에다 무위영과 장어영에 개편된 군병이라 할지라도 신설된 별기군에 비해 큰 차별을 받았던 점에서 사정은 더욱 심했다. 현역으로서 서울의 방위임무를 맡고 있는 군인들에게 13개월이나 군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나마 겨우 한달치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의 농간으로 不良한 쌀을 지급받게 된 사정은 마침내 이들의 쌓인 울분을 폭발시키기에 족하였다. 바로 이것이 군란발발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제기되는 의문은 정부에 의한 군제개혁에서 그렇게까지 구식군대를 차별대우하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상당한 수의 중앙군대가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정치적으로 不安勢力化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속한다. 결국 중앙에 근무하는 군사들에게 일년이상이나 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단순한 차별대우 이상의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구식군대가 민씨척족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지 않은 점 외에도 정권의 부패와 그로인한 중간관리의 농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이들 문제 이전에 당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던 국가재정문제의 심각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의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派生한 것이었을까.

17) 申國柱, 앞의 책(註2), <壬午軍亂의 性格>, pp. 440-442.

權錫奉, 앞의 책(註1), <壬午軍變>, pp. 392-400.

흔히 언급하듯이 조선후기 이래 삼정의 문란과 개항전후로부터 누적되어 온 민씨척족정권의 재정관리의 능력이나 방법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 관리의 부정·부패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들 지적사항은 전근대사회에서 흔히 등장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점만을 가지고 19세기 후반에 외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군란·정변 등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종래 菊池謙讓과 같은 시각, 즉 개화와 수구의 갈등, 대원군과 민비의 갈등,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 관리의 탐학·부정이라는 관점에서만의 해석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게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언급한 일본의 조선 침략정책에 따른 강제적 개항과 개항이후 일본상권의 확대 및 개화정책 추진에 따른 경비의 지출, 그리고 이러한 제문제에 의한 국가경제의 악화와 민씨척족정권의 부패 등이 함께 임오군란의 원인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맺 음 말

이상에서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군란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듯이 당초 군료의 지급문제에서 발발한 이 사건은 대원군측의 인물과 서울의 백성들이 가담하면서 당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들의 표적이 왕비를 포함한 척족정권과 일본공사관측, 그리고 개화파관료로 향해진 점은 임오군란의 원인에 대해 일정한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의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을미사변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외압의 문제나 내적 갈등의 제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의 전단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임오군란의 먼 요인으로서의 일본에 의한 조선의 침략이라는 흐름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의 계기는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개항이후의 여러가지 문제를 배태한 원인이 조선후기사회의 삼정문란 등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反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에서 이것이 지적된다. 일본에 의한 조선침략의 첫단계인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개화와 척사의 갈등외에도 그로부터 심화된 대일무역의 불균형이 국내경제구조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직접적으로 전래의 농민층과 수공업자층, 중소상인층의 몰락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농민과 도시 하층민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이다. 서울의 軍民에 의한 반일의 행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한 당시 정부의 개화정책이라는 흐름도 이 사건의 주요한 배경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초기개화정책은 당시로서는 아직 대외정세에 어두운 대다수의 국민일반과 척왜를 주장하는 보수유생들 그리고 대원군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심지어 관료내부로부터도 그러한 저항을 받았다. 앞서 전개된 신사척사운동이나 이러한 흐름을 타고 기도된 '안기영사건'이 이를 입증해준다. 한편 민씨척족정권하에서 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응한 논리로서의 '皮開化'는 '骨開化'를 추구하는 개화파와의 갈등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대원군계열의 인물과 척사를 주장하는 보수유생들에 대한 대탄압을 거친 후에 또다른 개화와 수구의 문제로 전환되어 갑신정변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룬다.

다음으로 개화정책의 일환이자 정치적 목적이 주요하게 가미된 군제개편은 별기군의 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로 이어져 임오군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대원군집권기의 대우에 비교되어 자연히 대원군측의 개입을 불러일으키면서 군란이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거기에서 널리 알려진 민씨척족정권의 부패와 관리의 부정은 개항이후 악화된 경제구조와 맞물려 군란에 서울의 백성들이 가세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반일·반정부·반척족의 성격을 띤 군란의 또다른 표적은 자연히 권력의 심장부인 왕비에게까지 향해진 것이라고 하겠다.